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미술관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399
----------	------

제출연월일: 2019. 11. .

제 출 자: 성동구청장

1. 제안이유

문화예술의 발전과 주민의 문화향유 및 평생 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성동구립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립미술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 나. 상설전 및 소장품 기획전은 무료로 하되, 기획전 및 특별전은 전시의 규모와 수준에 따라 성동구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음(안 제6조)
- 다. 구립미술관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10조)
- 라. 미술작품 등을 구입하려는 때에는 소장작품추천위원회에서 추천 사항을 정하고, 가격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의 적정성을 심의한 후, 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여야 함.(안 제11조)
- 마.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기증 신청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수락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안 제12조)

바.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성동구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를 둠(안 제23조~제28조)

사. 각 위원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3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1) 입법예고(2019. 10. 8. ~ 10.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 미반영

- 개선의견

·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필요

· 위원회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완 필요

- 미반영 사유

· 제척·회피 등의 규정은 준사법적인 권한 등을 가지고 있어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위원회의 경우 필수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나, 운영위원회는 단순자문위원회로서 우리 구 여건 및

타구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미반영.

· 수당 관련 대상 및 범위가 명시되어 미반영.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미술관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미술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장품”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소유작품을 말한다.
2. “이용”이란 소장품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사진 원판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대여”란 소장품 및 관련 자료를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4. “대관”이란 미술관 전시실 사용을 허가 받아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수집”이란 작품의 구입, 기증 및 관리 전환 등의 방법으로 미술관에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영시설) 이 조례에 따라 미술관의 운영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2장 관람 및 운영

제4조(개관 및 휴관)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

관한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제5조(관람 시간) 미술관의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은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등) ① 미술관의 관람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한다.

1. 상설전 및 소장품 기획전은 무료로 한다.

2. 기획전과 특별전은 전시의 규모와 수준에 따라 제23조에 따른 성동구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람료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무료관람에 대해서는 제7조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② 대관 받아 전시 등을 하는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관람료의 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로 한다)에 주소 둔 7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5.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6.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람료가 정해진 전시의 관람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이거나 의식이 불분명한 사람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3. 인화물질 등 관람과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미술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3.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구청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운영) 구청장은 미술관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소장품 구입 및 관리

제11조(소장품 구입 등) 구청장이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 등을 구입하려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되, 제29조에 따른 성동구립미술관 소장작품추천위원회에서 소장품 추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30조에 따른 성동구립미술관 가격평가심의위원회에서 추천된 소장품 가격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소장품의 구입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12조(작품 기증) 구청장은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기증 신청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제13조(소장품의 관리) ① 구청장은 소장품에 대하여 망실, 훼손되거나 도난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장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4조(소장품의 이용) ① 구청장은 소장품에 대한 이용 요청이 있을 경우 미술관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 따라 소장품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품의 규모와 수준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료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5조(소장품의 대여) ① 구청장은 미술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장품을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미술관 등이 공개 전시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3. 작품을 미술관에 관리 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6조(대여자의 의무) ① 제15조에 따라 대여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대여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소장품의 안전한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보험가입 등의 조치
2. 소장품의 대여에 따른 반출·반입에 필요한 사진촬영·실측기록·포장·운반 등에 관한 비용 부담

3. 대여기간 중에 소장품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

4. 소장품에 대한 모사·모조 등 복제 금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② 소장품의 대여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대여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대여자가 원래의 대여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여기간 중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여한 소장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소장품 불용결정) 구청장은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그 작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제4장 대관 등

제19조(대관허가) 구청장은 미술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작품 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전시실 등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대관허가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전시실 대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전시회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대관신청을 한 경우
 3. 제22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가 대관신청을 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미술관의 관리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21조(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미술관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대관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22조(손해배상 등) 대관자가 제21조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미술관 시설 또는 설비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5장 위원회

제23조(운영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성동구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를 둔다.

제24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미술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관 진흥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미술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4. 미술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미술관 소장품의 수집 등에 대한 사항
6. 초대전 등 특별전 개최 시 관람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5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의 사람을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1. 지역의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미술관 관련 업무 담당국장
4. 그 밖에 구청장이 미술관 운영에 심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6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장기출타,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

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2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미술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2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9조(소장작품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소장품 추천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성동구립미술관 소장작품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추천위원회 위원은 미술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 이내의 외부전문가와 미술관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을 포함한 3명 이내의 내부위원으로 구성장이 위촉한다.

- ④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위원의 참석을 배제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28조를 준용한다.
- ⑦ 추천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제30조(가격평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추천된 소장품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동구립미술관 가격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심의 대상 작품의 적정 가격 산정
 2. 그 밖에 작품 가격 산정에 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③ 평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미술 분야의 평론가, 교수 및 작가
 2. 다른 국공립미술관의 학예연구사 및 학예연구관
 3. 화랑 관계자 및 예술경영인
 4. 그 밖에 구청장이 가격의 적정성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에 공정

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위원의 참석을 배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28조를 준용한다.

⑥ 평가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⑦ 운영위원회, 추천위원회,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제31조(수당 등) 운영위원회, 추천위원회, 평가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미술관 명칭 및 위치
(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미술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321(행당동)

[별표 2]

소 장 품 이 용 료
(제14조 관련)

구분	기준	금액(원)	비고
사진 촬영	1점	10,000원	
사진 원판 사용	1매	5,000원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성동구립미술관 소장품 구입 비용(안 제11조)
- 각 위원회 운영 경비(안 제23조~제31조)
- 공립미술관 운영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안 제1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3. 미첨부 사유

- 운영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20,000천원), 위원회 경비(연 9,600천원), 소장품 구입비(40,000천원)가 대략 70,000천원 발생하며, 그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경미하여 미첨부
- 행정재산 관리위탁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예상되는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음.
-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에는 위탁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위탁료: 지방자치단체가 원가분석을 통하여 산출한 수입과 지출비용의 차액을 말함

4. 작성자

- 문화체육과 행정 9급 이민우 (02-2286-5206)

< 관 계 법 규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설립과 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수립)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공·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육성,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에 따라 소관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시(특별시·광역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삭제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인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이하 "전몰군경등"이라 한다)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제1호, 제2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이하생략)